

전주 객사 앞에 모인 도민들 “이젠 尹 파면이다”



지난 21일 전주시 전주객사 풍패지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촛불집회에서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집회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도민들 “헌재, 尹 탄핵 인용하라”

곳은 날씨 속 응원봉 들고 풍패지관서 열린 집회 참여
“계엄 사태로 일상 침해돼... 힘든 시간 끝났으면 좋겠다”

곳은 날씨 속에서도 촛불을 든 전북 특별자치도민들의 대통령 탄핵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21일 오후 4시 전주시 전주객사 풍패지관 앞.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이제 이 장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의 장으로 변모했다.
꼭 떨어진 기운과 오전부터 계속해서 내리는 눈발로 지난번보다 집회를 찾은 이들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외치는 600여명(경찰 추산) 시민들의 열망은 뜨거웠다.

시민들은 이번에도 손팻말과 함께 응원봉과 아광봉을 챙겨들고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사회자가 외치는 “내란수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고, 분위기 환기를 위해 흘러나오는 노래 속 가사를 윤석열 파면” 등으로 바꿔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집회의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자 추운 날씨에도 어느새 도로 한 블록이 시민들로 모두 가득했다. 차마 자리에 앉지 못한 이들도 길가 한 켠에 서서

나뉘주는 손팻말을 손에 꼭 쥐 채 뜻을 같이 했다.
무대 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발언 자리에서는 집회를 주관하는 관계자들은 물론 옛날 초등학생들까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목청을 높이자 도로에 앉아있던 시민들은 열띤 공감의 환호를 보냈다.
“술먹고 1시간 뒤 폭과 모임”이라는 토크톡 뒤는 깃발을 들고 온 한 시민도 있었다. 그는 “친구들끼리 술을 마실 시간이 없으니 짧게 마시고 가자는 뜻으로 예전부터 결성된 모임”이라며 “계엄 선포 이후에 이 깃발을 만들어서 매번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재밌는 모임 깃발을 넘어서 이걸 들고 온 이유는 우리의 일

상을 살기도 바쁜데 계엄 선포 후 그 일상이 더욱 침해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탄핵으로 이 힘든 시기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김도운(30대)씨에게 ‘날씨가 춥지 않느냐’고 묻자 “날씨가 추운 게 대수인가”라며 웃었다.
그는 “갈수록 나라가 형편어지고 소위 ‘개판’이 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모여서 다같이 탄핵이 되라고 외치고 하는 게 국민들의 열망이자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촛불집회를 주관하는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와 같은 촛불집회를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시스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합리적인 가격 결정 도모

민주 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발의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날로 커지면서 ‘금(金)사과·금배추 사태’ 등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에 따른 출하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은 지난 20일,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거래물량 등 의무 공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농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무로 규정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러한 유통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구조의 ‘경매제’가 꼽힌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경매의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외에도 농수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도매인’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수산물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은 여전히 유통단계가 복잡한 경매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은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시스

한덕수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크리스마스 전인 24일 전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시한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한 대행의 탄핵 추진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전에는 결정하지는 기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의총에서는 탄핵 여부와 시기 등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지도부는 한 대행의 입장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추진 여부 결정

총리실 “쌍특검 31일까지 검토” 기류에 민주 “조기 탄핵 가능”
24일 전후 여부 결정할 듯...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분수령

을) 12월 말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가, 탄핵은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설특검 임명절차 돌입 여부가 한 대행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분명한 테드라인을 잡아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구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도부의 한 의원은 “상설특검 추천 의회 기일을 정할 것”이라며 “그 기일을 지키는 지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내란 상설특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6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회 차원의 특검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후보추천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안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권한이 정지되면서 상설특검 임명 권한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겨졌다.
하지만 한 대행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특검법에는 후보자 추천 의회 기간을 ‘처제 없이’라고만 했을 뿐, 특정한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민주당

은 임명 시한을 고려하면 법을 취지상 2~3일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함께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 대행이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내년 1월1일)을 고려해 연말까지 최대한 결정을 늦추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탄핵 공세 고삐를 죄기로 했다.
강성 지지층의 불만을 의식해 탄핵 카드를 먼저 띄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말까지 기다렸다가 한 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지층 사이에서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후통첩에도 한 대행이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침묵하면 민주당은 실제 탄핵 모드에 돌입할 태세다. 탄핵소추안 초안은 이미 작성해 놓은 상태로 26일이나 27일 발의한 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30일 전후로 표결한다는 계획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뉴스시스

군산시의회, 2024년도 의사일정 최종 마무리

제2차 정례회 폐회... 내년 본예산 1조6523억원 승인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1일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5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6,547억원 중 삼암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52건에 23억7,70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

치했으며, 2025년 본예산을 1조6,523억원으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사업의 일부 조정,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완주 수청 공소 보존·활용 위한 방안 모색

권요안 도의원,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완주군 운주면에 위치한 천주교 전주교구 고산성당 소속 수청 공소(公所)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과 함께 문화유산 지정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권요안 도의원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정책팀장, 완주군 문화유산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수청 공소의 역사적 가치와 노후화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수청 공소는 1888년에 설립되어 병인



박해 이후 숨어 들어오는 신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1927년에 현 건축물이 완공되었고, 1958년에는 고산 본당 소속 공소로 변경돼 현재까지 그 기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수청 공소는 현재 노후화로 미사용 상태에 있으며, 1993년에 건축된 교육관만 사용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필요성·방안 마련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27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수소거래소, 글로벌 에너지 강국 도약 중요한 발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2층)에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수소경제포럼과 전북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열릴 예정이다.
국제수소거래소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토론회에는 국회수소경제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완주군,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며,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번 행사는 두 가지 주요 발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김재경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위원이 맡아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의 필요성과 역

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 후에는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영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수소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열쇠로, 국제수소거래소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 구축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에너지 강국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향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활성화,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주요 정책 과제가 논의되며, 국내외 수소경제 동향과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